



연합뉴스 지배구조개선 국회 토론회서 뉴스통신진흥법 개정 필요성 ‘공감’

“정치적 독립 제도화” 민형배·손솔·김재원 의원 ‘한 목소리’



▲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상단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조성은 언론노조 수석부위원장,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 황호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3개월째에 접어든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진보당 손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과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공동 주최했으며, 주최 측 의원들과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넘게 진행됐다.

■ 문체위 위원 4명, 한목소리로 “진흥법 개정 필요”

문체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홍 의원은 추사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합뉴스 지배구조와 재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며 “국가기

간뉴스통신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진흥법 개정 지원 의향을 내비쳤다.

김재원 의원은 인사말에서 “연합뉴스는 정치·경제·외교·안보 등 공공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최초 정보’를 생산하는 인프라”라며 “특정 권력이나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 구성원의 편집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체계, 그리고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안정적 기반을 갖춰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진흥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손 의원은 “연합뉴스가 지속적으로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필요하다”며 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 의원은 인사말

을 통해 “개정안에는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의 공적 책임 실질화, 뉴스통신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보장, 사회 각계 대표성을 반영한 진흥회 이사회 구성 확대, 민주적이고 투명한 대표이사 선출 절차 등 내용이 담겼다”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법률과 제도 보완에 온 힘을 다하겠다”며 입법 완성의지를 보였다.

■ 패널 대다수 “진흥법 개정 공감”…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는 이견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오세욱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 등 패널 3명은 모두 진흥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1면에 이어

다만 이들은 민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이 정한 진흥회 이사 추천 단체들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연합뉴스의 독립성과 편집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나머지 패널인 황호택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대통령의 이사 추천권 삭제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신문·방송협회'의 이사 추천권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진흥법 개정 앞서 연합뉴스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사회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연합뉴스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국민추천위원회'와 관련해서는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해야 하는 점 등 현실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국민의 대표성 측면에서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 전·현직 기자들의 다양한 의견도 나와

패널 토론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연합뉴스 전·현직 기자 3명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전 기자인 정일용 진흥회 이사는 "지분구조 개선이 결국 지배구조 개선"이라며 "진흥법 개정을 통해 KBS와 MBC가 가진 50%가 넘는 연합뉴스 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테크부 선임기자는 "진흥법 개정을 둘러싸고 현 제도로 사장이 된 경영진이나, 현 시스템 아래 정치권을 이용해 사장이 되려고 하는 사내 세력들이 오랫동안, 이 법 개정에 부정적인 기류를 형성

하려고 했다"며 "신속한 법 개정으로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 후견주의 타파, 편집권 독립 및 재정 안정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밝혔다.

사내 임의단체인 '사원모임' 대표라고 소개한 국제뉴스1부 강훈상 부장은 "진흥법 개정안에 방송 3법을 그대로 이식해선 안 되며 무작위로 구성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에 사장 평가·추천을 전면 위임하는 방식은 사내 반대가 매우 크므로 사장 추천위원회는 국민평가단, 최대 주주로서 진흥회, 그리고 사원들의 직접 참여가 적절히 혼합돼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토론회 말미에는 황 이사가 배포한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뉴스통신진흥회 입장문'에 대해 갑론을

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입장문에는 진흥회 독립성을 위한 재정안정화 방안, 신문·방송협회의 진흥회 이사 추천권 삭제 반대, 현 연합뉴스 대표이사·진흥회 이사 임기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회자는 해당 입장문이 황 이사 개인 또는 진흥회 전체 중 누구의 의견인지를 물었는데 황 이사는 "진흥회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이자 진흥회가 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문체부에 보낸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 이사와 엄주용 이사는 언성을 높이며 "해당 입장문은 진흥회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황 이사가 재반박하면서 한때 토론회장이 소란스러웠다.

패널	공통인식	핵심 주장	다른 패널과 달린 의견
오세욱	진흥법 개정 필요 정치권 영향 축소 필요	추천 단체 확대는 신중해야 하며, 연합뉴스 공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단체 중심 설계 필요	시민 참여 확대는 필요하지만 연합뉴스의 B2B 성격상 비중을 신중히 정해야 한다고 봄
이종관	법 개정 100% 공감 공적 책임 강화 필요	연합뉴스 공공성을 먼저 선언하고 국민 동의를 얻은 뒤 지배구조 개편 추진, 최소 원가 보장 방식 재정 안정화 필요	방송3법 틀은 따르되 연합뉴스 특화 조정 필요
황호택	재정 구조 개선 필요	대통령·신문협회·방송협회 추천권 삭제 반대, 진흥회 운영비도 정부 재원으로 전환해야	현행 추천 구조 유지 쪽에 가장 가까움, 임기 보장 강조
김여라	정치 영향 축소 법 개정 타당	진흥회 이사 증원 의미 있음, 내부 종사자 추천 타당, 편집 독립 강화 필요	변호사단체 추천에는 부정적, 시민 대표 단체 포함 검토 필요

3년 만의 임금인상...기본급 2.8% 인상·5년 근속휴가 신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가 2025년 임단협에서 임금 인상을 이끌어냈다.

임금이 인상된 것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동결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2025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작년 12월 29일 사측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10차례의 실무·본교섭을 진행했으며 약 한 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어 대의원회를 열고 추진 절차를 밟아 임단협을 최종 타결했다.

임협 핵심 내용은 기본급 2.8% 인상, 급식·통근수당 총 9만원 인상, 격려금·건강관리비 지급 등이다.

기본급 인상률은 최근 10년 새 최고 인상률인 3%에 약간 못 미치는 수치다. 그러나 급식·통근수당을 총 9만원 인상하기로 하면서 기본급 2.8% 이상의 인상 효과를 거뒀다. 급식수당 인상은 2017년 이후 8년 만이며, 통근수당 인상은 2021년 이후 4년 만이다.

단협에서는 5년 근속 재충전 휴가(5일) 신설, 간

주근로시간 확대 등이 최종 타결됐다.

그간 재충전 휴가는 10년 이상 근속 사원에게만 부여했으나, 이번 단협으로 5년 이하 저연차 사원들의 휴식권이 증대됐다.

해외 출장자에게 적용됐던 간주근로는 그동안 최장 10시간까지 적용했으나 이번 단협으로 최장 12시간까지 늘어났다.

특히 하·동계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대통령 순방 등은 무조건 최장 12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해 업무강도가 높은 국제행사 취재에 대한 보상을 늘렸다.

앞서 노조는 최근 5년간 기본급이 3차례나 동결돼 저연차 사원들의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이번 임단협에서 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의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해왔다.

고병준 노조위원장은 "수년간 급격히 후퇴한 노동 조건을 떠올리면 이번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임협에서 풀지 못한 현안들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며 노사 간에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과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지난 1월 28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임금·단체협약 조인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용성 위원장 “편집 자율성 강화·재정안정성 확보 필요” “진흥회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사장 후보 시민추천제 도입해야”



▲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 개정 관련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용성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자문위원장은 “연합뉴스가 국가기

간뉴스통신사로서 보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성과 편집 자율성을 강화하는 진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 구독료 대폭 삭감 사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합뉴스 지배구조 개선 방향으로 ▲진흥회 이사 증원과 추천 단체의 다양화 ▲사장 후보 시민 추천제 도입 ▲진흥회 이사 및 연합뉴스 임원 경력 사유 강화를 꼽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흥법 개정안에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내용이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편

집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편집규약 준수 ▲편집총국장 임면동의제 의무화를 반영하고, 뉴스통신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용자권익위원회와 관련해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과 위원 위촉·운영 방식 조항이 각각 진흥법과 연합뉴스 정관에 나뉘어 명시된 점을 지적하고 진흥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동안 사장이 임명하던 수용자권익위원을 노사 동수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사장이 위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 재정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적기능 평가와 함께 문체부와 체결하는 ‘공적기능 이행 및 뉴스 정보 구독 계약’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언론지원, 포털 공급 뉴스량 조절 등 언론생태계 발전 방안을 연합뉴스가 주도적으로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병준 지부장 “정치권 영향 축소·편집권 독립 강화가 핵심” 토론회서 구성원 목소리 전달…“과반이 진흥법 개정 찬성”

연합뉴스 구성원 대표로 토론회에 참석한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은 발제를 통해 “정치권 영향력 축소, 편집권 독립, 재정 안정화가 구성원 요구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고 지부장은 “2003년 제정된 진흥법은 정치 후견주의를 떨칠 수 없었으며, 편집권 독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재정(공적 기능 비용 보전·구독료) 변동이 편집과 경영을 흔드는 통로로 기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20년 넘게 반복된 법 개정 논의가 마침내 정치권 차원에서 공론화 단계로 나아갔지만 설계의 무게중심이 사장 추천 절차에 과도하게 쏠려 있다”고 지적했다.

또 “사장 선임 과정에서 연합뉴스 구성원이 실질적 역할을 할 통로가 사실상 전무하며 편집권 독립 강화와 재정 안정화 방안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뒤이어 “뉴스통신사는 방송사와 매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법 개정은 방송법 구조를 그대로 이식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권과 관련해서는

“연합뉴스 매체 특성과 공적 기능을 고려한 추천 주체로 구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 법안에는 편집권 독립 강화, 재정 안정화 방안이 누락돼 있다”고 강조했다.

고 지부장은 최근 5년 사이 노조가 시행한 3번의 진흥법 개정 관련 설문조사 결과도 설명하며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는 “2021년 5월 시행한 설문에서 ‘지배구조 개선 입법 추진’을 묻는 질문에 90%가 넘는 참여자가 찬성했고, 작년 12월 설문에서는 66%가 진흥법 개정을 찬성했다. 또 재정 안정화 방안, 편집권 독립 강화, 연합뉴스 공공성 공적 임무 근거 명문화 등에 찬성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달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과반인 54%가 ‘대표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신설에 ‘반대’ 의견을 냈지만,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조건을 달았을 때는 40%가 반대, 34%가 찬성했다”며 “사장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정도에 따라 그 찬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 고병준 언론노조 연합뉴스지부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제34대 노조 출범 1년...감사규정 원상복구·윤리현장 개정 기본급 3년 만에 인상...국내출장비는 13년 만에 인상 끌어내

제34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가 출범한 지 약 1년이 지났다.

그간 노조는 '보도 감사 논란'부터 '2025년 임단협'까지 편집권 독립과 근로자 권익 증진을 위해 투쟁하며 쉽 없이 달려왔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 동안 부족하게나마 해결한 사건과 개선한 근로조건은 조합원들의 참여와 집행부에 대한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난 1년간 노조와 조합원들이 일궈낸 성과를 정리한다.

■ 보도감사 논란 6개월 만에 사장 사과...감사규정 원상복구

황대일 사장은 지난해 7월 16일 '징비록 중단 전말과 사장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사내게시판에 올려 '보도감사 논란'에 대해 사실상 사과했다.

이어 보도감사를 위해 개정한 감사규정을 원상복구했다.

앞서 황 사장은 취임식 때 '노조 일각', '정치권 뒷배에 힘입어 인사 특혜를 누리는 부조리' 등을 언급하며 '징비록'을 작성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논란을 촉발했다.

뒤이어 노조 몰래 감사규정을 개정해 보도감사의 명분을 만든 뒤 감사실을 통해 과거 기사의 공정성을 들여다보는 특별감사를 단행, 편집권 침해 시도를 시도했다.

노조는 보도감사에 대해 줄기차게 항의·공문·성명 등으로 비판하며 문제를 제기하며 투쟁해왔다.

■ 보상휴가제 개선...의무사용일 줄이고 금전보상 주기 단축

지난 2년간 사원 불만만 초래한 '보상휴가제'가 지난해 12월 개선돼 올해 1월 1일 시행됐다.

개선안은 의무사용일을 기존 '16일'에서 '7일'로 줄이고, 보상휴가 사용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게 골자다. 의무사용일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은 익월에 보상한다.

이 제도는 구독료 삭감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2024년 3월 도입됐으나, 의무사용일 초과분에 대한 연장근로 수당을 2년 뒤에나 받을 수 있어 사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노조는 지난해 8월 협의단을 구성해 보상휴가제 개선을 촉구했으며 같은 해 11월 노사 잠정 개선안을 도출한 뒤 조합원 투표를 진행해 과반의 찬성을 받았다.

■ 작성 기자 몰래 포털고침 사건...문자 알림 신설·윤리현장 개정

현대차 회장 장남 기사 포털고침 사건과 관련해 편집총국이 ▲포털고침 매뉴얼 마련 ▲재발생 시

작성 기자에게 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윤리현장 개정과 포털고침 준칙 신설 등 3가지 재발방지책을 시행했다.

앞서 노조는 사건을 인지한 직후 긴급히 공정노동위원회·편집위원회를 열고 경위를 파악했으며 편집총국장에게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해당 기사는 작성 기자 몰래 포털고침됐으며 모든 지시는 편집총국장이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편집총국장은 작성 기자에게 사과했으며, 사내게시판에도 공식 사과글을 올렸다.

■ 3년 만의 임금인상...기본급 2.8% 인상·5년 근속휴가 신설

2025년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에서 노조는 기본급 2.8% 인상, 급식·통근수당 총 9만원 인상, 5년 근속 재충전 휴가(5일) 신설, 간주근로시간 확대 등을 이끌어냈다.

기본급이 인상된 것은 2023년과 2024년 임금 동결 이후 3년 만이며, 급식·통근수당이 인상된 것은 각각 4년·8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9일 사측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0차례의 실무·본교섭을 진행해 약 한 달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더불어 근속 10년 이상 사원에게만 부여하던 재충전 휴가를 근속 5년 사원에게도 5일 부여하기로 사측과 합의해 저연차 사원들의 휴식권을 확대했다.

앞서 노조는 최근 5년간 기본급이 3차례나 동결돼 저연차 사원들의 피해가 큰 점을 들어 이들에게 더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의 임단협 요구안을 사측에 제시해왔다.

■ 국내출장비 13만원으로 33% 인상...해외출장 간주근로 확대

사측이 노조 요구에 따라 지난해 9월 '국내출장비'를 33%(사원 기준)가량 인상했다.

국내출장비가 인상된 것은 2012년 이후 13년 만이다.

그간 국내출장비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않아 '8만7천원'(숙박비 5만원·일당 3만7천원)에 머물렀으나 사측이 노조 요구를 수용하면서 총 4만3천원이 인상돼 13만원(숙박비 8만원·일당 5만원)이 됐다.

노조는 해외출장 시 폭증하는 업무량에도 사원들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점을 들어 '간주근로제'의 간주시간 확대(대형 재난·국제행사 기준 10시간 → 12시간)를 추진했으며 단협을 통해 최종 타결했다.

이뿐만 아니라 노조는 법인카드로 지급되는 '해

외출장비'에 대한 사원 불편이 큰 점을 들어 일별로 지급하는 '원상복구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 모성보호 강화...임신·산후 1년 미만 사원 야간·휴일·연장근로 제외

지난해 3분기 노사협의회 논의 결과로 사측이 같은 해 10월 '임신기 사원 근로시간 제한 안내'를 공지했다.

해당 공지는 노조가 임신기 사원의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고, 사측이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원은 야간근로(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 연장근로(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노사는 2025년 단체협약을 통해 이를 명문화하고 모성보호 강화에 힘쓰기로 약속했다.

■ 법정 통상임금 준수 촉구...연장근로 수당 2차례 인상

노조는 출범과 함께 '법정 통상임금'을 준수해달라고 사측에 촉구하며 현재까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법정 기준이다.

사측은 현재 기본급과 4가지 정기적 수당(책임·직무·통근·급식)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있으나, 상여금과 그 외 수당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과 퇴직금은 법정 기준보다 낮게 산정되고 있다.

노조는 출범 초기 법정 통상임금을 준수하지 않아 턱없이 낮은 금액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로 수당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사측으로부터 평일·휴일 연장근로 수당 각각 1천원 인상을 이끌어냈다.

또 2025년 임금협상에서도 평일·휴일 연장근로 수당을 각각 2천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또 한번 수당을 올렸다. 현재 평일 연장근로 수당은 시간당 1만3천원,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시간당 1만7천원이다.

노조는 수당이 2차례 인상됐지만 법정 통상임금을 반영한 금액에는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하며 법정 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사측에 촉구하고 있다.

■ 조합원 대출 금리 1%로 인하...높은 호응에 대기간 5개월

노조는 출범 직후인 지난해 4월 26일 집행부 의결을 거쳐 조합원 대출의 금리를 기존 2%에서 1%로 인하했다.

연합뉴스 사추위 20년...정치후견주의 못 벗어난 사장 선임 구조

연합뉴스 1대 주주인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출범한 2006년 진흥회와 노동조합이 공동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는 1차 후보 추천을 맡았다.

진흥회는 정관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를 면접한 뒤 최종 후보를 연합뉴스 이사회에 추천했다.

공정한 사장 선임을 위한 장치였지만 정치후견주의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지는 못했다.

사추위원 5명 가운데 과반인 3명이 진흥회 이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나머지 2명은 노조 추천 외부 인사 1명과 노조·진흥회 공동 추천 외부 인사 1명이었다.

사실상 정치권이 선임한 진흥회 이사회가 사추위를 주도하며 1차 후보 추천 단계부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셈이다. 사추위가 그동안 '옥상옥'(屋上屋)이라고 비판받아온 배경이기도 하다.

더욱이 사추위 구성은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진흥회 정관에 근거했고, 사장 선임 방식도 당시 진흥회 이사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라졌다.

이 때문에 과거 8차례 사장 선임 과정은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구성원들은 불공정보도와 사내 민주주의 후퇴 등 폐해를 감내해야만 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8년과 2021년에는 사장

후보 선정 과정에 '시민참여단'의 의견과 평가를 반영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사장 후보 검증 절차를 공개하고 시민참여를 도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보 주권 수호'와 '국민 정보격차 해소'라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핵심 책무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후보자들에게 독립적인 공영언론 운영 방안, 공정보도 이행 방안, 북한 보도 방향, 연합TV와의 상생 방안 등을 질문했지만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구조적 역할과 공적 책무를 깊이 반영한 질문은 많지 않았다.

시민참여단 구성 방식도 한계로 작용했다. 연령·지역·계층별 대표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고, 매번 단기간에 급하게 꾸려졌다. 리서치 업체에 구성을 맡긴 점도 문제로 거론됐다.

2024년에는 시민평가단 구성과 공개 정책설명회가 모두 생략됐다.

진흥회는 사추위 면접만 진행한 뒤 이를 통과한 후보 3명을 대상으로 최종 면접을 실시했고, 1명을 연합뉴스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이제 연합뉴스 사장 선임 구조는 진흥법 개정안

이 발의됨에 따라 다시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공영방송 3사는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추천위원회(이하 국추위)의 1차 복수 후보 추천 절차를 도입하게 됐다.

반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사장 선임 구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진흥법 개정안에 방송법과 같은 '국추위' 신설이 반영된 가운데 노조가 지난달 20~24일 시행한 관련 설문조사 결과는 시사점이 있다.

국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참여자 가운데 22.63%가 찬성을, 과반인 54.32%가 반대를 선택했는데, 진흥회 이사 추천 몫 2명을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제시한 같은 질문에서는 34.57%가 찬성, 40.33%가 반대를 선택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진흥회가 사장 최종 후보를 결정하는 만큼 그 과정에 구성원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투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까닭에 학계에서는 정치권, 연합뉴스 구성원, 시민사회가 함께 토론하고 충분한 숙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향을 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면에 이어

조합원 대출 금리가 인하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대출 최고액은 1천만원으로, 상환은 월 급여 공제를 통해 최장 15개월까지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이뤄진다.

노조는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남은 대출금 이자를 1%로 낮춰 금리인하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했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은행보다 훨씬 저렴한 이자로 가계 운영비를 융통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는 5개월가량 대기해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호응이 높다.

■ 노조위원장과의 1:1 실시간 익명 채팅...월평균 10여건 상담

노조는 소통 채널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 8월 1일 '1:1 익명 오픈채팅방'을 개설하고 현재까지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

이 채팅방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제안부터 소소한 민원까지 모두 직접 노조위원장과 1:1로 상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노조원 또는 비노조원 구분 없이 누구나 채팅방에 들어와 말을 걸면 노조위원장이 답변한다. 상담자는 프로필을 익명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해 어떤 일이든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게 했다.

노조위원장과 손쉽게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열리면서 현재 이 오픈채팅방에서는 월평균 10여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접수된 의견 중 일부는 실제 근로조건 개선에 반영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 외국인 사원 차별했던 '사우회 규정'...노조 건의로 개정

외국 국적의 사원을 이유 없이 차별했던 '사우회 규정'이 지난해 11월 개정됐다.

과거 사우회 규정은 모든 사원이 자동으로 가입하게끔 정하면서도 '외국인 사원'은 제외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사원은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차별이 발생했고, 노조는 편집총국에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사우회 운영위원회는 해당 건의를 받아들여 규정을 개정했으며, 현재 외국인 사원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 편집국 당직자 처우 개선...'파견 남발' 방지책도 마련

노조는 지난해 8월 편집국 당직자들이 당직 근무를 마친 뒤 반나절은 무조건 휴식(간주근로)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했다.

그간 편집국 당직자들은 부서 근무를 8시간 한

뒤 당일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사실상 총 20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해 피로 누적을 피할 수 없었다.

휴식 부여 기준은 부서마다 달랐고, 불가피하게 곧바로 보상휴가를 사용해서 휴식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노조는 당직 직후 무조건 휴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고, 편집국이 이를 수용하면서 당직자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또 원하는 날에 대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잇따른 특검으로 인한 '파견 남발'도 노조 건의로 방지책이 마련됐다.

편집국에서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부터 시작해 탄핵 심판, 6·3 조기 대선을 거쳐 최근의 특검 정국에 이르기까지 8개월 넘게 부서 간 파견이 이뤄졌다.

급하게 기준 없이 주니어 사원 위주로 이뤄진 파견이 장기화하다 보니 특정 사원이 여러 차례 파견되거나 파견을 보낸 부서에 인력난이 빚어지는 등 역효과가 나타났다.

노조는 이 같은 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으며, 편집국은 ▲파견 당사자에게 1주일 전 파견 공지 ▲파견 1달 이상 금지 ▲파견자 명단 인사부·노조 공유 등의 방지책을 마련했다.

전 구성원 설문...재정 안정화는 '순비용 보전 방식' 선호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는 부정적...“구성원 의견 반영해야”

연합뉴스 구성원들이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이 무엇인지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표이사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추천위원회' 신설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지부(이하 노조)는 지난달 20~24일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뉴스통신 진흥법 개정 관련 2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대상자 733명 중 과반에 못 미치는 243명(33.15%)만 참여했지만, 재정 안정화 방안과 대표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재정 안정화 방안 '순비용 보전 방식' 선호

노조는 법률 자문을 받아 도출한 세 가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각각 의견을 물었다.

설문 참여자 과반은 세 가지 방안 모두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가장 높은 73.66%가 찬성한 안은 1안인 '국민 정보격차 해소 사업 순비용 보전 방식'이었다.

이 방안은 현행 진흥법에 '정부가 연합뉴스에 위탁한 국민 정보격차 해소 사업(공적 업무)에 대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용자할 수 있다'고 규정된 임의조항을 '순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구독료 계약과 별도로 국가가 위탁한 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순비용 정산을 의무화함으로써 민영 뉴스통신사와의 차별 논란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64.2%의 찬성표를 받은 2안은 '행정계약을 통한 공적 업무 대가 지급 방식'이다. 공적 업무를 행정계약 형태로 체결해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자의적 대가금 삭감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3~5년 주기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담 요인으로 지적된다.

3안인 '국고 부담금 의무화 방안'에는 62.55%가 찬성했다. 공적 업무 비용을 국고 부담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비용 삭감 위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독립할 수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입법 반대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한계로 언급됐다.

■ '국민추천위원회'에는 부정적 의견 우세

이번 설문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등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신설을 추진 중인 '대표이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에 대한 의견도 조사했다.

참여자 가운데 22.63%가 찬성, 54.32%가 반대를 선택해 부정적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뉴스통신진흥회(이하 진흥회) 이사 추천 몫 2명을 '연합뉴스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조건을 제시한 같은 질문에서는 34.57%가 찬성, 40.33%가 반대를 선택해 격차가 줄어들었다.

이는 대표이사 선출 과정이 그동안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만큼, 구성원의 의견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 진흥회 이사 추천도 "구성원 의견 반영"

구성원 의견을 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는 다른 문항에서도 두드러졌다.

참여자 다수는 진흥회 이사 후보 추천 몫 2명이 구성원에게 부여될 경우 그 방식에 대해 41.56%가 '외부 인사를 공모한 뒤 전 사원 총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노조 공모로 취합한 지원자 가운데 노조 총투표로 2명을 선출하는 방안에는 과반인 50.21%가 찬성했다.

또 전 사원 총투표로 이사 후보에 지원한 현직 구성원 가운데 2명을 선출하는 방안에도 과반인 54.74%가 찬성했다.

반면 노조위원장이 조합원 가운데 2명을 후보로 지명하는 방식에는 과반인 55.97%가 반대했다.

노조는 앞서 시행한 1차 설문조사 결과와 이번 2차 조사 결과를 종합해 구성원 총의를 도출했으며, 지난달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연합뉴스 지배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를 발표했다.

노조는 구성원 총의를 반영한 진흥법 개정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고, 앞으로도 구성원 의견 수렴과 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